

# 새누리당이 새겨 봐야 할 독일의 시민교육 - 독일의 연방정치시민교육원 현황 -

2015. 3. 18  
노명순 연구위원



여의도연구원

---

## 목 차

---

1. 독일의 정치시민교육 / 1

2. 설립목적 / 3

3. 연혁 / 4

4. 조직과 예산 / 8

5. 주요 사업 / 9

참고문헌 / 11

참고자료: 연방정치시민교육원(BpB)에 관한 설립법령 / 12

---

독일의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(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)는 우리나라에서 연방정치교육센터, 연방정치교육원, 연방정치시민교육센터 등으로 불림. 본고에서는 연방정치시민교육원으로 호칭함

## 1. 독일의 정치시민교육

### ○ 국가적 책무로서의 정치시민교육

- 독일의 정치시민교육은 「기본법」(Grundgesetz, GG)에 규정되어 있는 독일헌법의 근본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강화에 크게 기여
- 기본법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란 “일체의 전제정치와 폭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다수의 의지, 자유, 평등에 따른 국민의 자결(自決)에 근간하는 법치국가의 지배질서”를 의미
- 독일의 정치시민교육에는 인권 존중, 국민주권, 권력분립, 정부의 책임성, 행정의 법치성, 법원의 독립성, 다수정당의 원칙, 모든 정당에 대한 기회균등의 원칙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### ○ 독일 정치시민교육의 지향점(지원행정지침 제2조)

- 독일시민의 사회적·정치적 과정 및 갈등에 대한 판단력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,
- 자신의 권리와 이해관심에 대한 인지력을 배양하고,
- 더불어 사는 사람, 사회, 환경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,
- 자유민주주의 사회 및 국가질서 형성에 대한 참여 고양

○ 독일 정치시민교육의 원칙(보이텔스바흐 합의, 1976)

- 정치시민교육이 정당의 선거도구로 전락될 상황이 발생하자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학자가 모여 교육의 원칙 도출

① 강제성 금지(Überwältigungsverbot)

- 교육대상자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됨
- 정치적 사실에 대한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며, 판단 과정에서 교사의 간섭을 받거나 조정되지 말아야 함
- 독일에서 이 원칙은 특히 성장기의 학생이 향후 자율적 판단능력을 지닌 성숙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간주

② 균형·대립적 논쟁 확보(Kontrovertitätsgebot)

-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적으로 나타나야 함
- 특정의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상이한 모든 관점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
- 이 원칙은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사회의 조건 중 하나

③ 교육대상자의 관심과 이해(Schülerinteresse)

- 정치적 논쟁, 이를 다루는 정치시민교육이 학생 자신의 일(이해관계)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함
- 교육대상자가 주어진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배양
- 자신의 독자적인 견해와 판단능력을 스스로 형성해 갈 수 있는 분석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의 관심이 수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. 즉 교사 주도의 수업이 아니라 교육대상자 지향적인 수업

## 2. 설립목적

-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하고, 독일연방공화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비판적이며, 능동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
- 인권과 민주주의적 정치문화를 실현할 의무를 지니며, 초당파성과 학문적 균형을 원칙으로 함
- 정치·사회·문화·경제·생태에 대한 지식과 통찰 그리고 이해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토론프로그램 개발과 인가받은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보조를 통해 구현
- 법적 임무(정치교육을 위한 연방본부에 관한 법령 제2조)
  - 설립초기(1952):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관한 지식 확산
  - 정착기(1969): 민주주의 의식 고취와 정치참여
- 주요 역할
  - 실제로 정치교육수업을 직접 담당하는 교육기관은 아님
  - 연방 또는 연방주 각 관할영역에서 정치시민교육에 필요한 학술서적, 잡지, 간행물, 학교수업교재,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제작하여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
- 학교 밖에서 실제로 정치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, 재단, 단체를 재정적으로 보조하며 학술적·방법론적 자문

<표 1> 시대별 연방정치시민교육원의 주요 관심사

시대별	연방정치교육원의 주요 관심사
1950년대	나치주의 청산, 민주주의 제도 정착을 위한 민주주의식 함양, 독일 연방정부 건설과 운용
1960년대	공산주의-전체주의 체제에 대한 계몽,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정리, 사회변혁
1970년대	경제문제, 동방정책, 테러리즘, 정치교육의 교과목과 교수법 개발
1980년대	환경문제, 평화·안보문제, 신사회운동
1990년대	사회주의 청산, 동서독 화합 및 동독인의 체제 적응, 유럽 통합, 극우주의, 신기술 및 세계화
2000년대	지식정보사회, 이슬람문화 이해, 뉴테러리즘, 극우와 폭력, 청소년 문제

### 3. 연방정치시민교육원의 연혁

#### 1) 지역봉사를 위한 제국본부(1918-1933)

○ 설립목적

- 제국본부는 1차대전 패배 후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민이 정부를 신임할 수 있도록 방송홍보를 목적으로 설립
- 의회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국가형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정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정치적 판단력 함양
- 독일 역사에서 정치계몽을 위한 최초의 국영 홍보 및 교육기관

○ 1933년 민족사회주의노동자당(NSDAP)의 집권으로 15년 만에 해체

#### 2) 연방정치시민교육원의 설립과 체계화(1952-1969)

○ 1952년 콘라드 아데나워(Konrad Adenauer) 연방수상의 승인으로 신생 독일연방공화국 연방내무부 산하에 현재의 연방정치시민교육원 설립

### ○ 설립목적

- 2차대전 패전의 휴유증 회복과, 정치적으로 분단과 냉전체제, 의회 민주주의 등 변화된 현실에서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서독인에게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치교육 필요
-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“정치시민교육 활성화와 강화”를 목적으로 설립

### ○ 주요 업무

- 정부선전기관으로 오해할 것을 염려하여 직접적인 대외활동보다는 연구와 간행물 제작에 집중
- 정치시민교육에 의미있는 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, 비영리 시민 교육단체의 세미나 재정 후원

### ○ 주요 관심사

-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,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와 제도, 나치 과거 청산, 동구 공산주의

## 3) 변화와 개혁(1969-1981)

### ○ 연방정치시민교육원법 개정(1969)

- 1969년 최초의 사민당 출신 빌리 브란트 총리 당선으로 과감한 정치적·사회적 변혁 시도
- 당시 국가에 의한 정치시민교육은 “평생교육 내지 성인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속되어야 하며, 정치시민교육의 목표는 성숙하고 자율적인 시민 육성”으로 목표 정립
- 이를 반영하여 개정된 법에서는 교육원의 과제를 “독일시민의 정치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민주주의적 의식을 확고히 하며, 정치참여 강화”로 규정

○ 주요 관심사

- 갈등, 권력 등 민주주의의 현실적 측면의 이해
- 나치 과거청산, 환경보호, 좌익테러, 여성 분야

○ 보이텔스바흐 합의(1976)

- 정치시민교육이 정당의 선거도구로 전락될 상황이 발생하자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학자가 보이텔스바흐에 모여 정치교육의 3가지 원칙 도출

#### **4) 통일과 기술적 진보(1981-1989)**

○ 정치시민교육에서 뉴미디어의 사용 중요하게 대두

- 1984년 '뉴미디어' 담당 부서 신설
- 정치시민교육에서 영화, 컴퓨터게임을 이용한 교육콘텐츠 개발, TV 시리즈물로 '홀로코스트' 제작

#### **5) 통일독일을 위한 정치시민교육(1989-1998)**

○ 구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시민교육 강화

- 대화를 통해 새로운 독일에 대한 정보 제공
- 전체주의적 사고를 지닌 구 동독인이 공산체제에 대한 합리적 비판, 새로운 민주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함양 도모

○ 연방정치시민교육원장과 지방정치시민교육원장 성명서(1997)

- “민주주의는 정치시민교육이 필요하다”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
- 국제적 차원에서 미래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시민교육의 필요성 강조



## 6) 새로운 과제, 새로운 길(1999-현재)

### ○ 통일독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 운영

- 내적 통일을 위한 독일통일 시민상(Bürgerpreis zur deutschen Einheit, 2002~) 시상 제도 도입

※ 지역 또는 연방차원의 교육, 정치, 사회, 청소년, 문화, 경제 등의 분야에서 내적 통일에 기여한 독일 거주자에게 수여

### ○ 정치시민교육의 대상을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확대·실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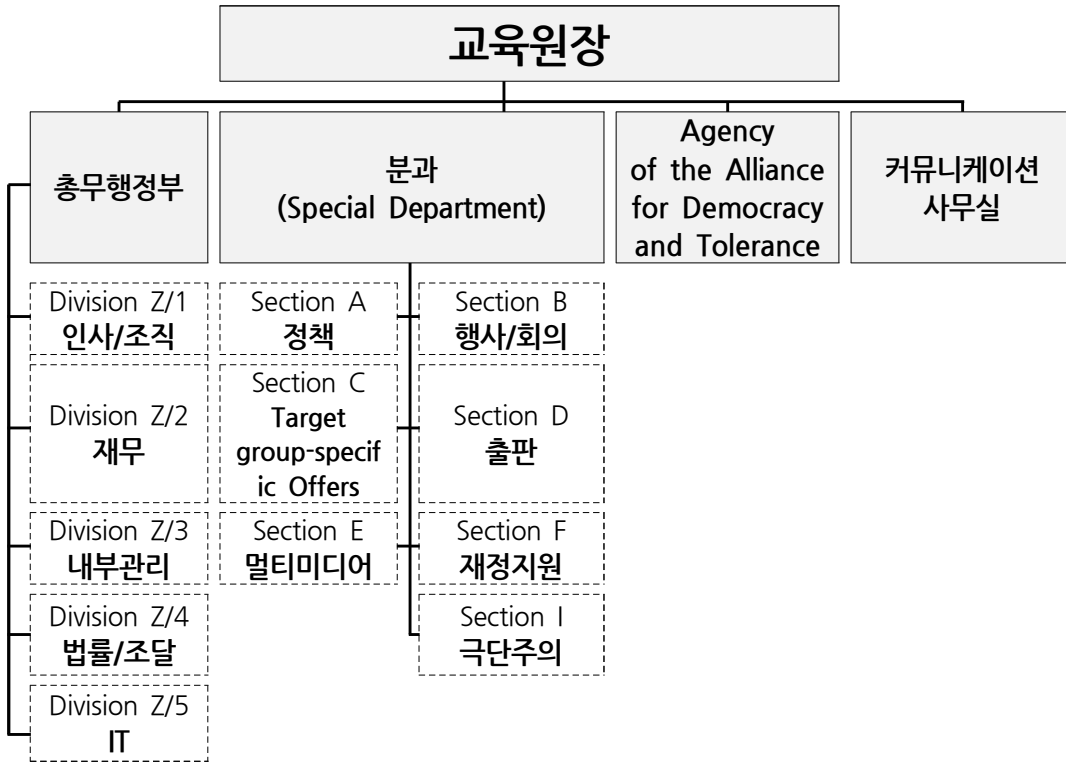
### ○ 관심 주제의 다양화

- 이주민과 독일인 사이의 화합과 통합, 복지국가와 시장경제의 미래, 독일사회의 폭력성, 극우주의, 유럽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등

## 4. 조직과 예산

### 1) 조직

○ 2012년 기준 약 200여명의 직원 재직



### 2) 예산

○ 2012년 기준 연간 예산규모는 3,500만 유로(약 520억 원)

- 연방내무성을 통해 연방예산으로 책정·지원

<표 2> 연방정치시민교육원의 예산

(단위: 백만 유로)

내역	2008년	2009년	2012년
사업비	25.6	25.5	24.0
인건비	9.4	9.6	8.0
운영비	2.9	3.3	3.0
합 계	37.9	38.4	35

조찬래 외(2012). p.29.

## 5. 주요 사업

### ○ 출판간행물을 통한 정치시민교육사업

- 신문, 잡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, 정치시민교육 관련 서적 발간
- 『Das Parlament(의회)』(1952-2000): 주간신문. 2001년부터는 연방하원의회에서 발간
- 『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(정치와 시대사)』(1953~) : 주간지. 연방상·하원의 주요 논쟁, 유럽의회의 주요 쟁점사안, 정치·경제·사회 문제 심층 보도
- 『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(정치교육에 대한 정보)』(1952~) : 정치교육 교사를 위한 간행물
- 『Schriftenreihe(도서시리즈)』(1953~) 제작

### ○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사업

- 만화시리즈 정치교육프로그램(Hanisauland - Politik für Dich, 2002~)을 책자(교사/학생용), 오디오북, 인터넷 자료로 보급

### ○ 정치시민교육 관련 학술모임 지원

- 토론 및 실습을 병행하는 형태의 포럼과 교육 지원
- 담당 교사를 위한 재교육 차원의 각종 세미나 개최
- ‘스포츠에서 나타나는 극우주의’, ‘여성’, ‘다문화’ 등의 주제에 대한 학술회의 지원(2009)

### ○ 외부 정치시민교육 단체와 협력 및 재정지원

- 주정치시민교육원, 정치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단체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·유지

- 지원조건을 갖춘 약 400여개의 외부 단체 재정지원
- 연간예산 중 운영비의 약 1/3을 매년 외부의 정치교육프로그램에 투입
- 최근에는 연방군의 정치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하여 민·군소통 및 상호교류 강화, 안보정책에 관한 담론의 저변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

○ 어린이와 청소년, 청년을 위한 정치시민교육

- 아동, 청소년, 젊은층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치와 민주적 공동생활 교육
- 청소년 대상 현지답사 프로그램: 나치의 만행을 체험하고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매년 이스라엘 수학여행 주최
- 정치시민교육 학생경시대회(Schülerwettbewerb zur politischen Bildung, 1971~) 운영
- 청소년민주주의상(Jugenddemokratiepreis, 2009~) 시상 제도 도입

## 참고문헌

- 이규영 (2005). 독일의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. 국제지역연구, 9(3), 157-186.
- 전미혜 역(2009). 바덴 뷔템베르크주 정치교육원 교수법 시리즈: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충분한가?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.
- 조찬래 외 (2012). 외국 정당의 정치교육과 제도화에 관한 연구. 한국 민주시민교육학회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.
- 최영돈 (2013). 독일의 통일과 장기적인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: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의 역할.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웹진 다다익선.
- <http://www.bpb.de/die-bpb/138852/federal-agency-for-civic-education>

## 참고자료

### 연방정치시민교육원(BpB)에 관한 설립법령

2001년 1월 24일

#### § 1

- (1) 정치교육연방본부는 연방내무부의 업무 범위에서 법적 권한을 지니지 않는 연방 영조물이다.
- (2) 정치교육연방본부는 그 소재지를 본(Bonn)에 둔다.

#### § 2

정치교육연방본부는 정치교육의 행위를 통하여 정치의 전체적인 주요 사실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견고하게 하며 정치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강화하는 임무를 지닌다.

#### § 3

- (1) 정치교육연방본부는 본부장에 의해 관리된다.
- (2) 본부장은 연방내무부 장관이 임명한다. 연방내무부 장관은 업무상 본부장의 상급자이다.

#### § 4

본부장은 모든 법적 행위에서 정치교육연방본부를 대표한다.

#### § 5

- (1) 정치교육연방본부는 정치교육의 기본업무에 있어서 최대 12명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에 의해서 지원되며, 전문위원들은 각각 4년의 임기로 임명된다. 한번의 재임은 가능하다. 학술위원회는 새로운 전문위원의 임명을 제안할 수 있다. 학술위원회는 새로운 전문위원을 임명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- (2) 위원회는 1년에 최소한 2회 소집된다.
- (3) 위원회는 전문위원 중에서 한 명의 위원장과 그 대리인을 선출하며, 연방내무부의 승인이 필요한 업무규정을 둘 수 있다.
- (4) 위원회의 회의는 정치교육연방본부 감독위원회 위원들과 연방내무부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다.
- (5) 정치교육연방본부장은 학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된 권고사항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연방내무부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.

## § 6

- (1) 정치교육연방본부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영향은 22명의 독일연방하원위원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에 의해서 견제된다.
- (2) 감독위원회의 위원은 독일연방하원의장이 독일연방하원의 교섭단체의 제안을 받아 임명한다.
- (3) 정치교육연방본부장은 연간 예산안, 계획보고서, 활동보고서에 대한 소견서를 감독위원회에 제출한다.
- (4) 정치교육연방본부장과 연방내무부 대표는 감독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다.

## § 7

정치교육연방본부는 각 연방주의 관할에 속하는 모든 사항에 있어서 각 연방주 최고 관청과 긴밀하게 협력한다.

## § 8

이 법령은 2001년 1월 24일에 효력을 발생한다.

1992년 6월 24일 제정된 정치교육연방본부에 관한 법령(Z6-006 101-035/3, 공동내각관보 526쪽)은 효력을 상실한다.

공동내각관보(GMBl) 270쪽.

출처: <http://www.bpb.de/die-bpb/51244/der-bpb-erlass>